

민주 '불법 당원' 의혹 광주로 … 현직·입지자 '위기감'

당원 모집 과정 고강도 검증…입당 원서 '대필 모집' 등 정황 포착
현 기초단체장·광역의원 3~4명 거론…전남 군수 1명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고강도 당원 전수조사의 불똥(11월 14일자 광주일보 1면)이 전남에 이어 당의 핵심 텃밭인 광주시로 튀고 있다.

최근 전남 지역 현직 기초단체장이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사실상 '정치적 사행선고'에 가까운 징징계를 받으면서, 비슷한 의혹을 받는 광주 지역 선출직 공직자와 입지자들 사이에선 '다음 타깃은 우리'라는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최근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소속 일부 선출직 의원 및 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당원 모집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 묻는 고강도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소를 두는 위장 전입이나 대리인이 조직적으로 입당 원서를 써내는 이른바 '대필 모집' 정황을 포착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

현재 광주에서는 현직 광역의원 3~4명과 현직 기초단체장 등이 조사 선상에 올라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지역의 또 다른 군수 역시 추가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특정 모집책(F1)이 수십, 수백 명의 입당 원서를 한꺼번에 관리하며 대리 접수했는지 여부다.

중앙당은 이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당원으로 가입된 '허수'가 존재하거나, 경선 승리를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긴 '오염된 표'가 다수 포함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고의적인 조작이나 불법 등원은 결코 없었으며, 열성적인 당원 확보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적 오해라는 주장이다.

조사 대상에 오른 A 기초의원은 "책임당원 확보가 곧 경쟁력인 상황에서 내가 직접 밸로 뛰어 받

은 명단을 제출하다 보니, 서류상 대리 모집처럼 비친 것 같다"며 "실제 당원들과 통화해보면 알겠지만 허위나 가공의 인물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들의 겉으로 드러난 해명과 달리, 물밑에서는 필사적인 생존 계획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소명서 제출만으로는 중앙당의 징계의지를 꺾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 당직자 등 이른바 '여의도 라인'을 총동원하고 있는 정황이 감지된다.

혐의를 받는 일부 인사들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유력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며, 중앙당 윤리심판원 쪽에 '정상 참작'을 요청해달라는 식의 우회적인 구멍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자칫 이번 징계가 확정될 경우 내년 선거 경선에 참여조차 못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지역 정가가 이처럼 패닉에 빠진 이유는 민주당이 이번 사안을 대하는 태도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7일 구복규 화순군수에게 '당원 자격정지 2년'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현직 군수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당원 모집 과정의 불법성을 엄중히 물어 내년 선거 공천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이 밖에도 전남 서남권의 군수 후보군과 도의원 예비후보 등 2명에게도 각각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 '무관용 원칙'을 전명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관행처럼 묵인되던 '줄 세우기식' 당원 모집이 이제는 정치 생명을 끊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며 "중앙당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 예측할 수 없어 입지자들은 물론 협력 의원들까지 숨죽이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

여야, 1차 입법전 종료…연말 '필버 재격돌'

접경지 대북전단 살포 경찰 제지 마련…21·22일 중 본회의 개의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나흘 간 처리를 예고한 법안 중 마지막 안건으로, 본회의 통과와 함께 3박 4일간의 임시국회 1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정국이 일단락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 야당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

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경고·제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외부에 부착된 물건의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무인 비행기구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막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두고 202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로 나흘간의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내란전단 재판부 설치법 등의 처리를 위해 이달 하순 본회의 재개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연말까지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국회의장과 협의 중"이라며 "21일 또는 22일 개의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1일 본회의가 시작이면 24일까지 3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22일 개의한다면 2개 법안만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법안에 대해서는 "내란전단재판부 설치법 상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정 가능성이 높다"며 "최종 확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시, 진상 규명하고 안전 혁신해야"

광주시의회 입장문…대표도서관 붕괴 안전 관리체계 질타

광주시의회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광주시의 부실한 안전 관리 체계를 질타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지역 안전의 사령탑인 광주시가 직접 관할하는 현장에서 4명의 소중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참담한 사고가 났다"며 "이는 시의 안전 관리 체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의회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이 과거 민간 영역에서 발생한 참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지난 2021년 학동 철거 건물 붕괴와 2022년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안전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 공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되풀이됐다"며 "시민들이 과연 행정을 믿고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성토했다.

의회는 사고 수습과 관련해 성역 없는 진상 규명

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주문했다. 설계부터 시공, 감리에 이르는 공사 전 과정을 낱낱이 조사해 안전 규정 위반이나 관리 태만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형식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의회는 "보여주기식 처방으로는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며 "광주시의 안전 정책을 원점부터 재검토해 비상한 각오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차원의 독자적인 대응도 예고했다. 의회는 향후 민간 안전 전문가들과 협력해 광주시의 안전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선인 기자 sunin@

여야, 검사장 인사 놓고 충돌

국힘 "검사장 강등 인사보복" vs 민주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

여야는 14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의향소 포기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던 검사장들이 줄줄이 좌천된 사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항소 포기의 법리적 근거를 요구한 검사장을 좌천시킨 것은 정권의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차단하려는 명백한 인사 보복"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지우기 위한 친권남용이자 위법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워 없이 이뤄진 이번 인사의 책임 라인을 끝까지 밝혀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기득권 수호를 위한 정치 검찰의 행태를 정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임 부대변인은 "단순한 내부 토론을 넘어서 정치 개입에 대해 책임을 물은 정당한 인사 조정"이라며 "이를 보복이라 규정하는 것은 특권 의식"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성명을 낸 주요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등으로 발령했다. 인사 직후 일부는 사직 의사를 표했고, 정유미 검사장은 강등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 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증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 행위에 참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h-well
국민건강보험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IGRA 보험GA협회